

하루 2만명 이용 송정역 주차장 대책없이 폐쇄

후면도로·주차빌딩 착공 이유 내년 4월·12월 문 닫아 광주시·코레일·철도시설공단 사업계획 엇박자 난항 불가피 대체부지 확보 어렵고 사설 주차장 요금 인상 주차대란 우려

하루 2만여명이 이용하는 광주송정역 주차장이 내년 상반기부터 후면도로와 주차빌딩 착공 등을 이유로 폐쇄될 예정이어서 주차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공사 주체인 코레일 광주본부와 광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 등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3개 기관이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엇박자를 내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19일 코레일-광주시 등에 따르면 내년 4월 송정역 제2주차장(207면)이 폐쇄되고, 후면도로 개설 공사가 진행된다.

광주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40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후면도로는 신덕지하차도와 송정지하차도를 잇는 왕복 2차선 1

km 구간으로 송정역 제2주차장 부지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년 12월에는 코레일이 제1주차장(401면) 자리에 주차빌딩을 착공한다. 코레일 광주본부는 306억원을 투입, 내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제1주차장(401면) 부지에 주차빌딩(6층 1600면 규모, 연면적 4만2500㎡)을 개설할 계획이다.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사이긴 하지만, 결국 내년 12월이던 608면에 이르는 송정역 1, 2주차장이 모두 폐쇄되는 것이다.

송정역 주차장 전면 폐쇄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 1일 5000원씩을 받아 온 인근 사설 주차장들은 주차요금을 7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주차요금 올리기에 나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후면도로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호타이어공장측과 토지보상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완공 시점이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광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은 후면도로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었지만, 이미 내년 4월도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이마저도 착공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광주시는 애초 코레일의 주차타워 공사가 시작되기 전 후면도로 공사를 완공하고, 해당 도로를 임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할 계획이었다.

광주시는 현재 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는 후면도로 실시 설계 용역 완료가 지난 5월 31일에서 지난달 31일, 다음달 21일로 두차례나 미뤄지면서 정확한 착공 시점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사지연을 철도시설공단 탓으로 돌리

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철도시설공단은 "도로 계획 부지에 있는 코레일 소유 유지보수 건물(5개)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용역이 늦어졌다"며 코레일의 비협조적 태도를 문제삼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건물 이전문제는 이미 협의가 끝난 상황으로 조만간 설계용역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광주시가 대체부지 확보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며 광주시의 더딘 행정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코레일이 광주시·철도시설공단과 사전 협의 없이 제1, 2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레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내년 4월 착공계획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근 사설주차장 활용 계획 등 다양한 방법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학생 절반, 학교·교사로부터 차별 경험

우승희 도의원 "종합실태조사로 대책 마련해야"

전남지역 학생 절반 이상이 학교 또는 교사로부터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더불어민주당·영암1)의원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앞서 '전남 학생차별 실태조사'를 한 결과, '학교 또는 교사로부터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49%(99명), '다른 학생의 차별을 알게 된 본적이 있다'는 응답은 11%(23명)로 나타났다. 학생이 차별을 직접 경험했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60%였다. '없다'는 38%(76명), 무응답은 1%(2명)였다.

이는 우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10월31일부터 11월17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한 전남지역 학생 200명을 분석한 결과다.

차별 내용은 학습지도와 시험이 가장 많았고 이어 각종 지원프로그램 선정, 표창장과 장학선발 등이었다. 차별 이유는 성적순위(4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지역 차별, 교사와 학생간 구별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또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학교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생회 또는 학생의 건의사항이 개선되거나 반영되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41%, 보통 25%, 그렇다 20%, 무응답 12%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또는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차별을 받아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16%(32명), '없다' 74%(149명), '다른 학생의 차별을 알게 된 적이 있다' 8%(16명), 무응답 1%(3명)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사항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응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성적순 선정 ▲중간지대 학생 차별 ▲학생 유치에 따른 지역학생 역차별 등 지역 차별 ▲남녀성차별과 학생간 비교 ▲언어폭력 등을 들었다.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사항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응 ▲각종 지원 프로그램 성적순 선정 ▲중간지대 학생 차별 ▲학생 유치에 따른 지역학생 역차별 등 지역 차별 ▲남녀성차별과 학생간 비교 ▲언어폭력 등을 들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까자 고춧가루 국내산 속여 학교납품 업체 2곳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중국산 냉동고추가 포함된 고춧가루 수백 t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에 판매한 고춧가루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농관원)은 19일 값싼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불법 유통한 경북 소재 고춧가루 가공업체 2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중국산과 국내산을 7:3 비율 정도로 섞은 고춧가루 54t(7억7000만 원 상당)과 중국산·국내산을 절반씩 혼합한 고춧가루 230t(33억 원 상당)을 '국내산 100%'로 속여 학교급식 식자재업체·김치 제조업체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유통시킨 고춧가루는 중간 유통업체를 거쳐 전국 초·중·고등학교 급식으로 납품되거나 일반인들에게 팔렸다.

농관원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올해 고추 작황 부진으로 국내산의 가격이 상승하자 육안으로 고춧가루 원산지를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 중국산을 섞어 팔아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관원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냉동고춧가루 판별방법'으로 지난 9·10월 광주·전남 64개 초·중·고에서 시료를 채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올해 광학현미경 판별방법을 활용한 단속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유통업체·음식점 등 56곳이 적발됐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직원이 광학현미경을 활용한 냉동고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방법을 시연하고 있다. /최해배 기자choi@kwangju.co.kr

북부경찰, 출소 3일만에 또 절도 50대 영장 신청

광주북부경찰은 19일 이모(56)씨를 잠금장치가 허술한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일 오전 11시 40분께 광주시 북부 운암동 A씨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현금 10만원과 주방에 있던 과일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다음날 같은 집을 털러다 집에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해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절도 혐의로 북역하고 출소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 등 전과 12범인 이씨는 주택가를 배회하며 문이 열려 있거나 잠금장치가 허술한 단독주택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문이 허술한 집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

민주노총, 노동자 권리 축소 반대 등 내일 총파업 예고

광주·전남 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광주형 일자리 반대 등 총파업대회를 21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노동 존중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 탄력 근로 시간제 기간 확대 등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데 여야가 따로 없는 모습을 보인다"며 강력한 총파업 동참 의지를 보였다.

광주본부는 특히 "자본가 정부 일방인 단력 근로제 국회 일방 개악을 강력히 저지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국민 약속

을 파기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 국민의 바람인 재벌체제가 청산되는 사회 대개혁에 노동자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본부도 이날 여수시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총파업 참여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모든 노동자의 단결, 교섭, 파업할 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혁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광주·전남 외에도 서울·경기·대구·세종 등 지역본부별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2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지도부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결의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혼술 먹고 이웃원룸 문고리 벽돌로 부순 30대 철창형

상대말

○...술에 취해 이웃원룸들의 문고리를 벽돌로 내리쳐 부순 30대가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서행.

○...1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최모(35)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원룸 건물 복도에서 적색 벽돌을 들고 다니며, 원룸 두 곳의 문고리와 디지털 자물쇠 등을 내리

쳐 부순 것은.

○...집주인의 신고로 붙잡힌 최씨는 경찰에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뒤 1층 현관 근처에 버려져 있던 벽돌을 주워다 문고리를 부순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며 선거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